

文 대통령, 신남방정책 핵심지 인도서 ‘경제’ 옮인

‘전략적 동반자관계’ 경협 박차… 대기업정책 전환 시사

인도 순방 성과

삼성 JY 독대·쌍용차 해고문제 거론
경제넘어 문화·외교 등 확장 합의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인 인도에서 경제에 ‘옮인’했다.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조율 등 한반도 문제를 놓고 통일·외교에 집중했던 문 대통령의 업무 중심축이 인도 국빈방문을 통해 ‘경제’로 옮겨가며 균형을 맞춘 것이다.

특히 그동안 소원한 듯 보였던 대기업과의 관계도 이번 인도 순방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다는 평가다.

삼성그룹 계열사 현장을 처음 방문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독대하면서 ‘삼성 기살리기’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또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과도 직접 만나 쌍용차 노동자 해고 문제 해결 노력과 주가 투자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뒀다.

물론 순방국인 인도와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양국간 경제 협력 발전에 더욱 힘을 쏟기로 했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인도 뉴델리 영빈관에서 열린 한·인도 기업인 라운드테이블에 앞서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과 쌍용차 해고자 문제와 관련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3박 4일간의 인도 순방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전(현지시간) 뉴델리를 출발해 두 번째 방문국인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현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과 모디 총리의 신동방정책을 기반으로 양국은 이제까지의 경제 중심의 협력 관계를 뛰어넘어 문화·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외교·안보·국방 분야까지 협력 관계를 확장시키는데 합의했다”면서

인도 순방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후 인도 총리실 영빈관에서 열린 ‘한·인도 CEO(최고 경영인)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을 만나 쌍용차 해고자 문제를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장 입장에 앞서 조우한 마힌드라 회장에게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 그것이 노사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다”며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말에 마힌드라 회장은 “저희가 현장에 있는 경영진이 노사 간 문제를 잘 풀어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마힌드라 회장의 답변은 해석의 문제로, 마힌드라 회장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다만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특별히 관심이 있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마힌드라 회장도 충분히 이해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마힌드라 회장에게 “한국 사업이 성공하기 기원한다”며 “한국에 더 많이 투자하고 노사화합을 통해 성공하는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나”도 물었다.

마힌드라 회장은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다 이겨낼 수 있다”면서

“(쌍용차 인수 이후) 지금까지 1조40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앞으로 3~4년 이내에 1조3000억 원 정도를 쌍용차에 다시 투자하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엔 뉴델리 인근의 노이다 공장에 위치한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준공식 축사에서 “노이다 공장에서 생산된 스마트폰이 중동, 아프리카 등 제3국 수출로 이어져 양국 간 경제협력의 결실이 더욱 커지길 기대한다”면서 “노이다 공장이 인도와 한국 간 상생 협력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준공식에 앞서선 이재용 부회장과 5분 가량 독대 시간도 가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당초 이 부회장과의 대화는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인도가 고속경제성장을 계속하는데 삼성이 큰 역할을 해줘서 고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멀리까지 찾아주셔서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됐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연루돼 고종을 겪었던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인도 순방길을 이용해 먼저 손을 내민 것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포스코·금호석화 등 韓기업 신용등급 상향

등급전망 ‘안정적’→‘긍정적’ 옮라
조선·자동차 등 하반기 전망 어두워

“포스코가 향후 12~24개월 동안 우수한 영업실적과 임여현금흐름 흐자를 지속할 전망이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6월 포스코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조정했다. ‘긍정적’ 등급 전망에는 포스코의 신용등급이 향후 12~24개월 안에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3분의 1 이상이라는 견해가 반영됐다.

금호석유화학도 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됐다. 한국신용평가는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한 배경으로 ▲주력 사업인 합성고무 부문의 수익성 회복 ▲비화학 사업인 열병합발전 부문 증설로 수익성 개선과 이의 변동성 완화 ▲대규모 투자 마무리에 따른 재무 건전성 개선 등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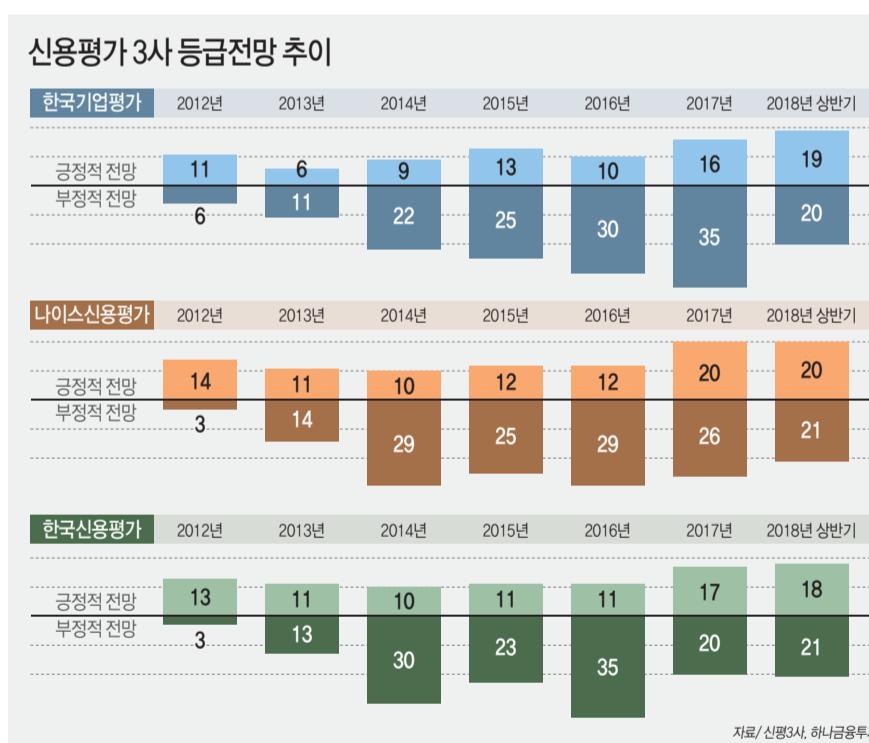
기업들이 신용쇼크에서 벗어나고 있다. 실적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렸기 때문이다. 다만 조선·자동차·디스플레이 등 업황 리스크가 큰 산업군은 하반기 전망이 다소 어둡다.

11일 신용평가 3사(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가·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나이스신용평가의 상반기 기업 신용등급 상향부채율(상향 업체 수를 하향 업체 수로 나눈 것)은 1.3배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0.5배보다 좋아진 것이다.

한기평은 0.9배였다. 2016년 0.4배, 2017년 0.6배로 상향 기업 수가 늘고 있다.

한신평은 1.3배로 평가했다. 지난해에는 0.4배였다.

등급 전망도 장밋빛으로 바뀌고 있다. 나이스는 ‘부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21개였다. 지난해 26개에서 4개 줄어든



것이다. ‘긍정적’ 전망은 지난해와 같은 20곳이었다.

한기평은 지난해 35곳에 달하던 ‘부정적’ 기업들이 올해 20개로 줄었다. ‘긍정적’ 평가가 내려진 곳도 19개로 지난해보다 3개 더 늘었다.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된 기업은 KB증권과 포스코대우,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솔테크닉스이며, 반대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은 두산중공업과 엠벤처투자, DB금융투자다.

나이스신용평가 권성철 평가정책본부 연구위원은 “개별적 기업 요인 외에 석유화학, 증권, 항공 등 우호적 업황에 따른 실적개선, 현금흐름 및 재무안정성 개선과 개선 전망, 구조조정 효과 등이 등급 전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이런 분위기가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업종이나 개별 기업별 전망은 차별화된다.

나이스에 따르면 산업별로는 ▲절대적

으로 낮은 수준의 신규수주, 수주잔고, 선거와 후판 등 원가상승압력 강화 등으로 여전히 매출 및 수익성 개선여력 제한이 예상되는 조선업종, ▲글로벌 자동차시장의 저성장세와 경쟁격화, 선제적 시장 대응 부족으로 실적부진을 겪고 있는 자동차업종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의 실적흐름과 밀접한 관련성이 높은 자동차부품업종 중국기업 공급확대에 따른 수급 불균형, 높은 투자부담 등으로 현금흐름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디스플레이업종이 하반기 주요 모니터링 대상이다.

그룹별로는 현금창출력 저하와 수익창출력 대비 재무부담이 존재하는 두산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 등이 주의 대상이다. 또 국내외 사업여건 악화로 매출과 수익성, 재무안정성이 훼손된 롯데그룹, 현대자동차그룹도 하반기 관찰 대상으로 꼽혔다.

/김문호기자 kmh@

기업 R&D 투자공제율 14%→9.4% 감소

거꾸로 가는 R&D시계… 제도개선 시급

프랑스 30%로 확대한 제도 운영
中·日도 공제율 확대·연장 추세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우리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공제율이 2/3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요 경쟁국들은 R&D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우리 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R&D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했고 R&D 비용을 많이 지출한 기업에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2019년 3월까지 일몰연장했다.

일본은 지난해 세액공제율의 범위를 확대하고 2015년엔 공제한도를 상향하였으며 공동·위탁 연구비에 대해 고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신설했고 R&D 비용을 많이 지출한 기업에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2019년 3월까지 일몰연장했다.

프랑스는 2008년 세액공제율을 10%에서 30%로 대폭 인상했고, 미사용 공제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환급을 해주며 박사학위자의 첫 직장에는 해당 인건비의 2배를 2년간 세액공제 해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월 발간한 ‘2016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R&D 지출규모는 국가 전체 R&D의 58.8%이며 기업 전체 R&D의 75.6%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R&D 투자 세제지원이 38개국 중 중소기업은 10위, 대기업은 25위로 대기업의 조세 지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의 주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비결은 R&D를 통한 기술 선도를 한 것에 있다”며 “중국 등 주요국들과 기술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제 현실에서 R&D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특정 기술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는 열거주의를 채택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